

인본주의에 기초한 평등성과 수월성이 균형잡힌 교육정책 방안

조시오*, 안관수**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ducational policy plan balanced with excellence and equality based on humanism

Si-O Cho*, Kwan-Su An**
Lecturer, Dep.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군사정권 이후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보고, 역대 정부의 일관된 교육혁신정책인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속성과 그에 따라 파생하는 교육정책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 요구되는 국가의 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으로서 ‘인본주의 교육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수월성과 평등성이 분리된 교육정책이 아닌 양자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인본주의(人本主義) 위주의 교육정책을 의미한다.

주제어 : 평등성, 수월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인본주의, 인권교육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look into the education policy of the civilian government, the practical government,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after the military government, and then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to neo-liberalism, which was a common education innovation policy of past government. This study tries to suggest a far-sighted national policy of education the present government should orient. Furthermore, the article presents 'humanistic philosophy of education' as a new paradigm of a future education. This means balanced humanistic education policy, not disintegrated education in which excellence and equality take different paths.

Key Words : equality, excellence, neo-liberalism, education policy, humanism

1. 머리말

21세기는 창조적인 지식이 가치 결정의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은 여전히 학교교육의 질에서 결정된다. 학교교육은 문화유산의 전달과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적 기제 역할을 수행한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 됨.

Received 24 September 2013, Revised 20 October 2013

Accepted 20 Nov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Kwan-Su An(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Email: ksan@wonkwang.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김영삼 정부 이래로 20년이 넘게 시장경제논리를 기반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해 오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미 선진복지국가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지고 그 결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축소되고 정부의 비능률이 등장한 것을 자유주의 입장에서 비판하여 사회와 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인적 자유의 영역을 확대하며 시장경제기능의 활성화를 기본 입장으로 삼는 정책을 말한다([19]). 서유럽 중심의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일련의 국가 정책들의 실패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여 1980년대 이후 선진민주국가에서 본격적으로 부활한 일련의 자유주의 정책들과 사상 및 이론을 가리킨다.

오늘날 한반도의 정치 지형의 최대 쟁점은 공교롭게도 보수·진보진영 막론하고 복지국가체제의 실현에 있다. 선진국들이 이미 과거에 거쳤던 자유주의와 복지국가 단계를 거친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적어도, 신자유주의 교육논리를 추구했던 문민정부 이전까지는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 및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군사독재정권을 거쳐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그리고 현 이명박 정부(실용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교육의 질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동기([36])였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논리에 집중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교육의 핵심은 교육적 평등의 실현을 이상으로 해서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보장하고 교육체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파생하는 문제점은 최소한의 평등권인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마저도 차별화된 자본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칫 피지배계층 자녀의 교육권이 박탈당하기 쉽다는 데에 있다. 이런 점에서 종래의 한국교육의 근본적 문제는 ‘수월성과 평등성의 불균형’으로 진단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강화되어야 할 공교육의 ‘공공적 원리’를 거꾸로 약화시키고 ‘시장의 원리’로 바뀌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교육상품, 수요자 중심교육, 교육의 경쟁력 강화 등이 시장의 원리를

따르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구호들이다. 시장화는 공교육의 민주화와 평등, 교육의 사회적 보장과 같은 교육의 운영권을 시장에 넘겨주고 시장의 선택에 교육의 방향을 맡기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요즘 우리 교육이 겪고 있는 위기의 진앙지이다([15]). 뿐만 아니라, 갈수록 증폭하는 교육의 위기 사태는 공교육의 자기역할 부재가 아니라 공교육의 위기와 무관하게 철저하게 체계화된 입시의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입시로 인해 공교육 또한 입시 준비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며, 사교육시장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물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14]).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율([39]), 최고의 낙태율([22]), 최고의 이혼율을 보일 정도로 가정과 사회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경제 성장의 그늘에서 교육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등교육에서조차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다루는 인문학 교과, 예컨대 철학과목이 푸대접을 받고, 중등교육에서는 국·영·수와 같은 입시위주의 주요 교과목만을 중시 여기고 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시장 전면 개방이 현실이 되고 있지만, 1차 산업의 자급자족을 위한 먹거리교육과 같은 경제교육, 창의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권교육,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지구공동체교육 등은 뒷전에 밀려 있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의 수월성 그늘 밑에서 공교육의 직무유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요건인 인본성(人本性)마저 상실한 교육적 위기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맹종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과연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정권 이후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보고,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교육혁신정책으로 활용한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속성과 그에 따라 파생하는 교육정책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에 요구되는 국가의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인본주의 교육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수월성과 평등성이 분리된 교육정책이 아닌 양자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인본주의 위주의 교육정책의 시도를 의미한다.

2.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한 국가의 교육은 평등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공교육의 이념으로서 평등성과 수월성의 추구는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평등성(equality)의 개념은 크게 ‘동일성’(sameness)과 ‘적합성’(fittingness)이라는 두 가지 원리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일성’의 원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평등한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어떠한 불평등성 또는 불평등한 조치들도 배격하고 획일적 기회균등을 추구한다. 동일성의 원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교육에서 평등성은 교육기회나 자원의 배분이 교육대상 집단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적합성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자에게 적합한 대우를 해 줄 때 평등성이 충족됨을 강조한다([6]). 따라서 적합성의 원리에 따르면 교육에서 평등성은 교육기회나 자원의 배분이 교육대상 집단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평성의 성격을 갖게 된다([17]).

평등성을 교육의 영역에서 고려해보면, 교육의 평등에는 차별됨이 없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고 나아가 교육과정 면에 있어서도 도시 농촌 간, 경제적 빈부 간 그리고 남녀 학생들의 차이를 좁히는 과정의 평등 그리고 학습 결과에 대해서도 평등한 대우가 전체적으로 보장되는 결과의 평등이 있다([4]). 기회균등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 사항에 근거하여 인종, 성별, 종교의 차별 없이 교육받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교육의 진학률이 기본적 기회균등의 정도를 말해준다. 과정의 평등은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서 학교간의 차이가 없는 평등이다. 또한 결과의 평등에 의하면, 각각의 교육의 결과들이 다르겠지만 학업성취의 평등한 대우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평등이다. 롤스(Rawls)의 보상원리([41])가 제기된 이후, 교육에서도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덜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육의 평등성을 공평성으로 이해하자면 교육의 투입부터 산출에 아르기까지 단순히 1/n로 배분하자는 동일성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17]).

평등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분배개념이 있다. 분배

는 크게 동등한 분배와 능력별 분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동등한 분배는 독립적인 가치와 판단체계를 가진 개별 인격체의 고유성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25]). 동등한 분배와는 달리 능력별 분배원칙은 개인차를 전제로 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또는 환경적으로 개인차가 있기 마련이어서 한정된 환경에서 고유의 가치와 관심에 따라 한정된 교육을 받는다. 개인차에 따른 고유한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고 최대한 키우는 것이 수월성으로의 교육이다. 능력별 분배원칙은 합당한 분배기준이 전제된다면, 각 개인의 잠재능력이 다양하고 창조적으로 개발되는 수월성의 교육을 촉진한다([3]).

일반적으로 수월성(excellence)은 문자 그대로 ‘우수함’, ‘탁월함’, ‘뛰어남’을 뜻하지만, 실제로는 교육의 질적 향상, 교육경쟁력, 엘리트교육 등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20]). 박성익([18])은 “수월성이란 개인적,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영역에서 최고 수준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누구나 추구할 수 있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가드너는 “수월성이란 유능함만이 아닌 생활의 모든 면에서 최고의 수준을 추구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능력에 관한 수월성 교육과 함께 인간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하는 수월성까지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VanTassel-Baska ([43])는 “수월성이란 사회적으로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에서 이상적인 기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과정과 수행”으로 정의하면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영역에서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trike([42])가 제시하는 수월성 개념 접근에 의하면 우리가 교육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수월성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개인 차원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수월성은 규준지향적(norm-referenced)이 될 것이다. 반면에 준거지향적(criterion-referenced) 수월성의 경우는 개인들간의 경쟁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준 달성의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별 교육기관들이 얼마만큼의 질적인 수월성을 확보하느냐가 교육의 관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수월성은 초·중등 단계에서는 개인의 잠재적 능력 개발이라는 수월적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규준지향적 수월성이 바람직한 반면에, 대학교육은 대학기관의 양적·질적 역량 강화를 추구하

기 때문에 준거지향적 수월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17]).

수월성 교육은 개인별로 다양한 영역에 대한 고유하고 탁월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수월성교육은 개인별 다양한 수월성교육뿐 아니라 제도적 다양성을 추구한다. 개인의 재능과 능력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되고 이에 따른 교과 선택권이 자유롭게 제공되고 학제의 다양성이 확보된 여건에서 수월성 교육은 탄력을 받는다([3]).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월성 교육의 근간이 되는 개인차의 개념은 학생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개발의 측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차를 고려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기 최대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와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10]).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추구 교육정책은 공적 가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 투입 당위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적 가치를 추구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정당화되기 쉽지만, 특정 개인들의 사적 자유를 신장해주기 위해서 국가 재원이 투입될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23]). 올해 개교한 제주 국제학교(NLCS Jeju)는 학교법인인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사실상 관 주도 귀족학교이다. 연 학비 4000만원이 넘는 이 학교 신입생들의 40%가 서울 강남 3구 출신학생들이라는 점이 이 학교의 성격을 상징한다. 국가가 세금으로 귀족학교를 짓고, 거기에 예상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할 적이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30]).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사회정의의 구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만약 교육에서 사회정의가 지닌 역할을 부정한다면 보편적인 공교육을 지지하는 모든 논리적인 정당성들을 부인하는 셈이 된다”([37]).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국가권력이 개입할 경우에는 공적 가치의 확대와 평등한 분배, 즉 공익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 한다([23]).

국가가 사회정의라는 공적 가치를 구현하려면 피지배 집단에게 더 많이 그리고 먼저 유리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국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현재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은 어떤 의미에서 불평등 정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현실을 평등하게 만들려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역차별의 유형이어야 한다. 공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국가로서는 자유의 허용 또는 확대보다 자유

의 균등한 향유(享有)를 목표로 삼아야 마땅하다([23]).

그러나 국가는 내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시도해온 것이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유형의 정책들은 개인적 자유의 극대화로 수렴된다. 선진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교육정책들-특성화 공립학교(Magnet School), 자유 등록(Open Enrollment), 계약학교(Charter School) 등-은 부모에게 자녀교육선택권을 최대한 허용하거나 보장하려고 한다. 사적 자유에 기반을 둔 정책들은 자유경쟁 논리 아래 추진된다. 시장경제 체제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유경쟁형 정책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곧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더욱 유리하기 마련이다([23]).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향유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유가 불평등을 정당화하거나 심화시킬 때 교육의 선택권 허용이 곧 교육의 선택권 보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월성을 추구하는 일련의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불평등 정책이 된다.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정책은 선택의 자유와 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무한 허용되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수월성 교육정책의 전제조건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게 사적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보장하는 공적 가치, 즉 평등적 교육정책을 균형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3.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속성

3.1 문민정부 이후의 교육정책

3.1.1 김영삼 정부 : 문민정부(1993~1998)

문민정부의 교육정책은 국내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세계화에 따른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월성 제고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았다. 1980년대 후반, 국내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강하게 분출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분권화와 자율화가 추진되었다.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외에서는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인해 형성된 단일의 글로벌 경제권이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들간의 무한경쟁을 요구했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는 각 국가

들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혁신을 추진하도록 만들었다([31]).

이러한 세계화 전략의 기치를 내걸고 문민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부응하는 교육구조의 전반적 구상으로 제출된 것이 다음 아닌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이다. 이 개혁안은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교육공급자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논리를 교육개편의 근본원리로 삼았다. 이 교육개혁안은 교육의 시장화를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보다 정확하게는 자본이 요구하는-노동력 형성에 적합한 구조로 고등교육에서부터 초·중등교육까지의 개편을 꾀하였다. 대학교육의 시장화,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을 통한 학교선택권 부여, 수준별·선택형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5]).

문민정부는 고등교육 역시 신자유주의적 기조 아래 대학을 연구중심 대학과 일반대학으로 이원화하였으며, 학부제의 시행으로 학과의 생존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어졌다. 시장의 필요에 따라 대학의 학과체제가 재편되고 기존의 대학 서열화는 더욱 고착이 되었다([15]).

3.1.2 김대중 정부 : 국민의 정부 (1998~2003)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은 IMF체제 유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세계경제의 흐름이었던 창조적 지식기반사회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했다. 교육공약 역시 자원중심에서 지식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어가는 경제구조에 맞추어 구성되었다. 이러한 교육개혁 의지는 1998년 2월 12일에 발표한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개혁과제에도 드러난다([16]).

문민정부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담론을 대세로 만들고 난후, 국민의 정부는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신지식인의 육성'을 구호로 내걸고, 신지식인을 새로운 교육적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 신지식인은 변화하는 경제상황에서 '끊임없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인간'으로, 이와 같은 신지식인의 양상은 국가발전 전략으로까지 격상되었다. 지식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지

식기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당시 국민의 정부가 교육개혁의 야젠다로 삼았던 정치적 이데올로기였다([31]).

문민정부가 교육시장화의 기초를 공고히 했다면 국민의 정부는 IMF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계기로 교육부문에 대한 개편작업에 발 벗고 나섰다. 교원정년단축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편의 서곡이다. 신자유주의는 대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의 연장선상에서 교원의 정년단축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교육적 논리 대신에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년단축을 강행하였다([15]).

고등교육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BK21(두뇌한국 21)사업이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선진 연구인력 양성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개혁 교육정책으로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대학 모집단위의 광역화와 대학교수의 계약제 및 연봉제 실시, 대학의 신입교원 선발에서 자교 출신교수의 쿼터제 실시 그리고 연구업적에 따른 교수평가제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의 문제점은 추진과정에서 개혁의 주체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관료중심의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는 개혁의 주체여야 할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선정했기에 생긴 부작용이기도 했다([31]).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월성의 원칙은 자립형사립학교제도의 도입과 외국인학교 설립의 완화, 조기유학 규제 폐지, 고액과외 규제 포기 정책을 통해 시행되었다. 이는 교육의 평등성보다는 경쟁을 추구하는 문민정부의 신교육정책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교육 소외계층이 기대했던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빈곤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배려를 끝내 이루지 못했다.

3.1.3 노무현 정부 : 참여정부(2003~2008)

참여정부는 "혁신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적 혁신과 국민통합을 2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시장투명성을 위한 혁신, 정치혁신, 교육혁신, 부정부패 청산 등을 주요 혁신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 정부로부터 계승된 대표적인 교육정책은 교육의 평등화와 무상교육의 확대였다.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는 참여정부로서는 절대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사안들이었다([31]).

그러나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역시 신자유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사례로 WTO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과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한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정책의 시행 그리고 대학을 기업형 교육기관으로 인식한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들 수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 노선이 평등과 분배를 표방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기초 유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시이다. 특히 NEIS 도입 추진은 노무현 정권이 공공연하게 표방한 인권 중시 보다는 정보화에 따른 경제권의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는 데에서 교육적 한계를 찾을 수 있다. NEIS는 모든 학사기록을 인터넷으로 통합 관리하는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 교육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에서의 정보인권 보호보다는 정보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의 이윤창출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중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전인교육 발달에 중요한 음·미·체 과목의 수능 제외,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목고 설립의 자율화 등은 파행적인 지식교육 중심의 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국정철학으로 삼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평등성’이었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 평등성을 근간으로 시행된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교육 노선의 거센 물결 속에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정책의 유지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대학 교수협회의의 법제화와 대학운영위원회제도의 도입 검토 등을 통한 대학의 자치 실현 등도 교육의 평등성을 기반으로 한다. 참여정부는 정치권력의 태생적 조건이 평등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교육혁신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입하였지만 3불정책의 유지에서 볼 수 있듯이 어쉴픈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1.4 이명박 정부 : 실용정부(2008~2013)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표방하는 실용정부의 교육정책은 일선 학교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평등성보다는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율형사립고 육성, 기숙형 공립고 신설, 영어 공교육 강화, 마이스터고 설립과 같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국제중학교의 설립,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 일제고사 실시 및 성적 공개, 엄격한 학교평가와 교원평가 강화 등이 그 핵심내용이다. 이는 ‘4.15 학교자율화 조치’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쟁과 자율, 선택과 집중,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구호아래 교육의 시장화로 특정 지워지는 신자유교육정책의 최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연유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조상식([29])에 의하면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완성”으로 규정된다.

수월성 교육 추구라는 미명하에 학업성취도 평가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적절한가에 대한 반성적 성찰 없이 학교와 교사를 변화시키기 위한 평가적 자료로 사용될 때 그것이 학교교육에 얼마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처벌적 책무성에 활용해온 미국의 경우가 타산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버드 대학 계량심리학자인 다니엘 코레츠(Daniel Koretz)가 지적한 바와 같이, “책무성의 압력으로 비롯된 변화는 교육의 원래 목표가 아닌 평가 자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부패시킨다([13]).

수월성교육의 산물인 특수목적고와 외국어고등학교 그리고 자율형사립고의 신설 등은 특정한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략한 지 오래이다. 자율형 사립학교 제도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립학교가 교육과정 편성권, 등록금 책정권, 학생선발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도입의 실제 결과는 중상류계층의 귀족학교 설립이 될 뿐이다. 이는 계층별 중등학교의 출현과 평준화 체제의 해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중등교육의 평등성이 깨지는 결과를 낳는다. 동시에 자율형 사립고의 육성은 교육이 완전히 상품으로 되었다는 선언이기도 하다([15]).

실용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은 공교육부실담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공교육부실담론은 일반 학교의 학업성취도가 하향평준화되고 있다는 구실로 수월성 교육을 위

한 국제중학교와 자립형·자율형사립고 등을 확대하고,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며, 입시 자율화와 같은 일련의 교육의 자율성 개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공교육의 사회통합 기능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서열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며, 교육을 통한 계급불평등 재생산구조를 더욱 확고하게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8, 12]). 실용정부 교육개혁정책이 추진하는 학교유형 다양화는 엘리트교육과 일반보통교육으로 이원화하는 계층분리교육이며, 수월성은 소수사립학교 우수학생 집중화이며, 학교자율화는 교육자율화가 아니라 학교내에서 사교육 실시를 허용하는 학교의 입시학원화이다. 학업성취도 공개는 학교효과성을 밝히고, 효과성에 따른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효과성과는 거리가 먼 우수학생 비율공개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은 “가진 자를 위한 프렌들리” 교육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12]).

문민정부가 발표한 신자유주의적 ‘5·31 교육개혁안’은 실용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정책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육의 자율화 정책에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속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대학입시 자율화’로 2007년도부터 진행된 입학사정관제 지원확대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연계 강화’로서, 그 핵심은 “대학교육의 자율화를 추구하는 한편 대학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이 연계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용정부는 2007년 5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대학이 자체평가한 정보 공개를 근거로 정부가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때 이를 활용하는 방안, 즉 ‘대학정보공개 - 대학평가 - 재정지원’의 연결시스템을 형성하였다. 주요 평가 4대 지표로는 교원확보율, 취업률, 신입생 충원률, 교육비 환원율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학의 지원방식 역시 일반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전면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립대 법인화 추진 사업을 들 수 있다. 국립대 법인화를 통해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 의사결정(조직·인사·재정)을 승인함으로써 법인화의 여건이 조성된 서울대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학부교육 선진모델 창출을 위한 ‘학부교육 선도대

학(ACE)’ 사업과 지역대학, 지역사회, 지역산업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추진 등을 들 수 있다([27]).

실용정부의 교육정책은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교육의 평등성보다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슬로건 하에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3.2 신자유주의와 교육정책

지금까지 우리는 문민정부부터 실용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별로 주요 교육정책을 살펴보았다. 자율과 선택 그리고 경쟁을 통해 학교교육을 ‘교육 시장’에 내놓는 방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았다. 일관되게 신자유주의 논리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쟁과 자율, 선택과 집중,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구조 아래 자립형 사립고 확대, 초·중등학교의 성적공개, 강의평가, 대학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 대학의 구조조정, 국립대학의 법인화 등이 수월성 교육의 가치를 내걸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시행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초래한 문제점은 없는가? 여기서는 주로 초·중등 학교교육과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초·중등 학교교육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면,

첫째로, 교육 현장에서 피교육자의 학습 선택권만 강조될 뿐 정작 교육자의 교육선택권은 간과하고 있거나 경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을 받는 이들은 아직 학습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이다. 이것은 대학생의 경우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교육자의 교육과정 선택권과 교육 지도권이 요구된다. 즉,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육자의 교육의지나 교권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고등교육에 필요한 필수 교과목의 지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인문학 분야의 전공학생들에게는 철학과 외국어 그리고 자연과학 분야의 전공학생들에게는 수학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월반제, 입시부활, 특수목적고 설립, 국제외국어고 설립, 자율형 사립고 신설 등의 교육개혁안은 “능력차”에 따른 차별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불

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10]). 이처럼 능력차의 개념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수월성 교육에 대한 당위성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셋째로, 시장경제원리가 교육에 적용될 때의 문제점은 '공교육'의 개념, 즉 교육은 정치적 영역에서 그 목적과 수단이 공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35]). 그러나 공교육의 개념이 약해지고 시장의 메카니즘에 따르게 된다고 해서 실제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11]). 신자유주의 교육논리에 의해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실용정부가 출범하면서 오히려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강화되고, 중요한 교육개혁정책 현안들이 중앙정부의 정치적 주도성에 의해 타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시장논리적 교육정책의 지속적인 기초 유지는 교육 공공성의 이념을 실종시킨다는 점이다. 교육의 기회는 계층의 차이나 재산의 소유 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의 비용은 전체 사회가 공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선택과 자율 그리고 경쟁이라는 명목 하에 입시 경쟁을 부모의 계층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귀결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교육소비자의 교육비용 지출의 차이가 서열화된 대학교육의 기회와 함수관계를 가진다면,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기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경쟁의 논리에 의해 주도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논리는 교육의 공공성 실종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여 사회적 계층 구조를 고착시키고 이를 심화시킬 뿐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의 총비용을 전체 사회가 부담해야 하며,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해서 오히려 무상교육의 연한이나 보상적 교육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민정부 이래로 전개된 신자유주의 대학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이념의 핵심이 교육의 본래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규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기반사회, 경쟁력, 인적 자원, 세계화라는 용어들이 모두 신자유주의사회에서 경제를 규정짓는 목적적 개념들이며, 경제적 목적이 교육의 목적으로 포장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28]).

둘째, 대학의 구조조정 방안 역시 자율화와 경쟁의 논

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구조조정 방안은 외부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대학들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판도를 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구조조정의 실제 권한을 갖고 새로운 판도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매우 '규제적인'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2]). 이는 대학의 구조조정 역시 시장원리에 의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하는 신자유주의적 속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성격이다.

셋째,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전면 개방은 교육식민화가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학문과 외국학위에 대한 선호경향이 강한 우리 현실에서 외국계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를 받는 지배계층이 그러한 식민교육자본을 통해 지배계층의 헤게모니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외국 학문에 대한 무분별한 선호와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경쟁이 산업이나 경제의 논리는 되겠지만 교육의 논리로서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이다. 산업체의 경쟁과 달리 교육은 본래 경제적 가치나 경제적 요인 외에도 인성교육이나 교사-학생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정신적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가능성이 신장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이다. 경쟁은 약자나 취약 계층에게 불리한 것인 만큼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은 교육기회의 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발단이 되는 공교육 부실담론은 교육의 목적을 수월성 추구라는 인지적 측면에만 한정되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파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에서 인간성 교육이 도외시된 이러한 병리적 현상들이 결국은 오늘날 심각한 교육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질 높은 교육'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는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인본주의 교육논리'를 그 대안으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4. 균형된 교육정책 : 인본주의 교육논리

공교육의 이념으로서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의 추구는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교육의 평등

성과 수월성은 상호 연계 혹은 결합되어 있다.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모두 개념적으로 교육의 질과 관련되어 있고, 교육의 질이 높다는 것은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이 동시에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17]). 개별 학교의 효과성(school effectiveness) 측면에서 볼 때 효과적인 학교는 결국 교육의 공평성과 수월성이 동시에 달성된 학교이기 때문이다([20]). 그러나 교육의 평등성 추구에 의한 교육 결과의 평등성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소수의 유능한 사람들이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횡포에 의해, 즉 가드너가 말한 “민주주의 역설”(Paradox in Democracy)에 의해 재능 있는 소수의 수월성 발휘가 억제되어서도 안 된다. 공교육 부실담론에 따르면, 우수한 학생들의 성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수월성이며, 그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관건이 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정당화되는데, 문제는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평등이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담론에서 수월성과 평등성은 그 조화점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12]).

따라서 교육에서 불가피한 두 가치의 충돌을 우리는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된 교육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학업성취 위주의 수월성 교육과 획일적 교육기회 보장에 초점을 맞춘 평등성 교육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원적이고 수평적인 능력관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17]). 이러한 교육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를 본 연구에서는 인본주의 교육논리에서 찾고자 한다.

인본주의란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808년 독일의 니트hammer([40])에 의해서다. 그에 의하면, 인본주의 교육이란 성장 세대들에게 ‘인간성의 도야(Bildung der Humanität)’와 ‘인간교육(Menschen-bildung)’을 실현하는 노력([40])으로 보았다. 서구사회에서의 인본주의 교육은 학업성취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수월성을 위한 교육, 혹은 학업성취 위주의 질 높은 교육에 대한 반작용으로부터 비롯되었다([26]).

오늘날 신자유주의 교육논리에 의해 주도되어 온 한국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학습

자가 경쟁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채 학습자의 개성과 인권이 무시되는 학업성적 위주의 획일적 평가 및 선발방식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잠재능력이 사장됨은 물론 그들 중 다수가 학교교육의 실패자로 전락되어 부정적인 자아개념 속에 빠지고 마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자아실현에 있다고 보는 인본주의 교육관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26]).

인본주의 교육논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의하면 현대 한국의 학교교육은 지나치게 수월성만을 강조하는 교육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의 인간화, 자아실현, 인권 존중, 인성교육, 타인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교육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이 상대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교육논리에 의해 경시되어 왔던 것이다. Patterson(1973)은 이와 같은 현상을 현대 학교교육의 위기로 보고 있다(Patterson, 12-13). 그에 의하면 수월성을 위한 교육이란 결국 학생들을 경쟁의 밀림에 몰아넣었으며, 이 밀림에는 오직 한 사람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교육 풍조 속에서 학생들의 자발성이나 학습의 즐거움은 상실되고 만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학교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는 학생들의 자연적인 능력을 저해한 장소이며, 학교의 잠재적인 기능은 인간 정신의 파괴에 있다는 것이다([26]). 비인간적인 입시경쟁구조의 학교교육 환경에서 세계 최고의 자살율, 이혼율, 낙태율을 과시하며, 부정적인 디지털 증후군과 학교 폭력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교육 현실에서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연 무엇인가? 공교육이 지나친 인지적 측면의 경쟁 구도보다는 인간성교육이나 마음교육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공교육부실담론에 대한 끝없는 논쟁보다는 무엇보다도 참다운 인간성의 도야와 참다운 인간성의 실현을 위한 인본주의 교육의 필요성이 제고되어야 할 시점이다. 학급붕괴, 학교폭력, 공격성, 우울증, 게임중독 등과 같은 청소년 세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은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간의 합리적 의사소통과 행위조절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한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 즉 문화적 재생산과 사회통합의 사회화

과정에 장애가 있을 때 병리적 현상이 생긴다고 보기 때 문이다([12, 38]).

인본주의 교육은 인간의 본성 혹은 인간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인본주의가 내세우는 포괄적인 가치는 모든 사람이 인간임으로 해서 존귀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적인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개개인의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육에 있어 각 개인의 능력을 남김없이 개발하려는 생각과 통한다([33]). 그러므로 인본주의 교육은 기존의 수월성 추구 교육과 경쟁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볼 수 있다. 인본주의적인 학교는 높은 수준의 지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개발하여, 자율성을 함양하고 인격을 형성하는 동시에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인본주의 교육논리는 경쟁 구도 속에서 삶을 유린당한 학습자들에게 전인교육과 인간 본성에 충실하는 교육을 통해 학교교육의 건전한 방향과 도덕적 환경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인본주의 교육은 엄밀히 말해서 전인교육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이 새롭게 부각되는 까닭은 교육이 지나치게 지적인 학습에 기울어,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학습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을 바로 잡으려 하는 것이지 지적인 학습을 경시하여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본주의 교육이 바르게 이해가 되려면 인간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하는 전인교육의 개념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33]). 여기서 전인교육이라 함은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인 영역의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조화된 인간성의 힘으로 사람마다 타고난 소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하는 자아실현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33]).

이와 같은 인본주의 교육논리가 균형된 교육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교육은 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할만한 주도적인 실천력을 이행해야 한다. 아도르노([34])는 교육이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해 저항할 능력 없이 당시의 사회적 힘에 따라가기 수준으로 기능하는 교육을 “어설플 교육(Halbbildung)”이라고 비난했다. 둘째, 교육은 인간성의 도야 혹은 인간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교육의 인지적 측면을 경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학업성취 위주로 치우쳐서 구성원간

의 합리적 의사소통과 행위조절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는 병리적 현상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셋째, 교육은 학생 스스로 인권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참여의 과정’으로서 인권의 지식과 가치, 그리고 기법을 이용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할 수 있게끔 정교하게 계획된 학습활동이다([24]). 인권교육의 목적은 학생들 자신의 삶을 주체로 세워나가기 위한 것으로 그들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을 주체적 학습행위자로 하여 그들을 인권교육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7]). 넷째, 교육은 전인교육의 풍토를 토대로 질 높은 수준의 수월성 교육과 더불어 최소 수혜자들의 배려를 위한 평등성 교육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지식을 구성하고 관리하며 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사회관계망사회(Social Network Society)를 살아가는 개인의 자율적·선택적·집단지성적 능력은 사용자의 마음활용법에 의해서 결국은 인류사회에 득(得)이 될 수도 혹은 실(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21]). 그러므로 인본주의 교육을 기반으로 한 조화로운 교육정책은 피교육자의 인간 본성에 내재된 자발적인 힘을 기르는 일과 자기 ‘스스로의 도야함’(sich bilden)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5. 맺는 말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그 정책 또한 참으로 진지하고 신중한 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문민정부 이후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없이 교육정책이 흔들렸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했다. 역대 정권의 교육개혁에 대한 관심은 공교육 체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였다. 공교육의 민주화와 사회적 공공성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세계화·정보화라는 큰 물결 속에서 교육에 시장논리를 전적으로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김영삼의 문민정부 이후로 현재 이명박의 실용정부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 교육개편

의 방향은 '교육의 시장화와 경쟁'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논리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편이 공교육의 민주화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있는데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시행한다는 점과 군사독재정권 하의 낡은 교육구조를 청산한다는 점에서 얼핏 교육개혁적인 모습으로 인식된 탓에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적 교육 패러다임은 결국 민주시민적, 공동체적 교육내용들을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대체하고, 우열반 편성,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 경제 논리에 의한 인위적인 대학 구조조정 사례 등을 통해 공교육의 기본적인 평등성 침해와 공교육의 파탄을 불러오게 되었다. 어느 민족, 어느 사회든 엘리트교육은 필요하다. 하지만 소수의 엘리트교육을 위해 교육의 평등성을 간파하고 특정계층을 위한 특권적 교육이 시행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의 사회적 기능은 언제든 강조되어야만 한다. 교육이 인간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갖도록, 특정한 소수가 아니라 한국사회 구성원이라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회가 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야 하고, 지금 현저히 위축되고 있는 평준화정책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1]).

국가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교육개혁이나 하는 것이다. 분명 학생 전체를 위한 교육, 학생의 주체적인 삶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친화성향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경쟁에서 이긴 학생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에 대부분의 교육적 투자와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 및 학교의 수월성뿐만 아니라 평등성 추구에도 동일한 행·재정적 지원을 기울임으로서 양자 간 조화를 이루는 교육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주도하고 있는 '혁신학교' 운동의 교육적 성과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미래의 교육정책은 인간성을 강화하는 인본주의 교육논리를 토대로 하는 교육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인본주의적 교육논리에 의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높은 수준의 지력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동시에 학생 스스로 인권교육에 참여하게 하는 자율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들이 인권교육을 참여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과 수업시간 외에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7]). 참여의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기성찰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학교교육은-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32])이 현대사회의 특성을 '위험사회(risk society)'로 언급한 바와 같이-사회관계망사회에서 무방비로 노출된 정보 위험 요인들을 학습자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이 자리매김하도록 가치지향적인 교육을 시행해야만 한다. 정보위험사회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노출된 학생들의 건전한 삶의 영위를 위해서는 현행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과정에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마음교육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인간다운 삶의 향유를 위한 인본주의 교육을 지향할 때 가능한 일이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2012.

REFERENCES

- [1] Nae Hee Kang, Neoliberal Education Policy under the Roh Moon-Hyun Government, Education Review, Vol.- No.14, 11-27, 2003.
- [2] Tae-Joong Gahng, A critique of the Neo-Liberalistic Conception of Higher Education Reform in Korea, Korean Education Inquiry, Chung-Ang University, Vol.19, 41-57, 2004.
- [3] Kyung Hwa Ko, A Study on the Education for the equality and excellence,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2(2), 1-22, 2007.
- [4] Yo-Han Ko,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 Seoul: Hakminsa, 1989.
- [5] Education Reform Commission, Education reform plan for the new education system established. 1995.
- [6] Gyeong-Geun Kim, Excellence and equity in secondary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Education, Autumn a Conference Papers, 25-52, 2005.
- [7] Yong-Chan kim, A study on the Improvement Scheme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ducation a collection of treatises, 24, 141-154, 2004.
- [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1210114513§ion=03
- [9] Chang - Hwan Kim, Educational thought of Humanism, Publisher, 2007.
- [10] Cheon-gie Kim, Improving Policy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Deepening of Education Inequality, Sociology of Education, 4(1), 61-83, 1994.
- [11] Cheon-gie Kim, Critical Study on Educational Reform with Marketing Logic for Globalization. Sociology of Education, 7(3), 219- 238, 1997.
- [12] Cheon-gie Kim, A critical study on hegemonic discourse of the educational policy of Lee Myung-bak's government : the discourse of the low educability of the public school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9(1), 81-102, 2009.
- [13] Cheon-gie Kim,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neoliberalization of Korea education : Becoming like competitive cram schools and establishment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1), 119-149, 2012.
- [14] Tae-Kyun Kim, "Education movement starting from the real struggle challenge, Is responsible for the future", The Radical Review, 38, 130-143, 2008.
- [15] Hak-Han Kim, "Neoliberalism and public education catastrophe", Education Review, 1, 52-62, 2000.
- [16] http://www.kdi.re.kr/infor/ep_view_source.jsp?num=12973&menu=1
- [17] Ji-Eun Lyu, Review on Equality and Excellence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28(2), 1-16, 2007.
- [18] Sun-Gik Park, Concept and direction of education excellence,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18, 2006.
- [19] Jung-Soo Park, "Neoliberalism and university reform",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10, 176-195, 2003.
- [20] Sang-Jin Ban, Korea Education, where to go?. The Korean Educational Association, 2005.
- [21] Kwan-Su An, The Characteristics of Maum Humanities: Understanding in Concept of 'Building',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9(2), 153-164, 2011.
- [22] <http://www.womennews.co.kr/news/43313>
- [23] Ookwhan Oh, Dilemmatic relationship between public value and private freedom in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8(1), 93-109, 2008.
- [24]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hat will you do for Human Rights Education, Seoul: ORUEM Publishing House, 2000.
- [25] Jeong-il Yun, Su-hyeon Jeong, Diagnosis of school education in Korea, Seoul: JIPMOON Publishing House, 2003.
- [26] Sung-ho Lee, "The role of counseling and education of humanism for self-realization", Youth counseling research, 4, 55-66, 1996.
- [27] Ju-ho Le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versity :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positive change, Wonkwang University lecture. 2011.9.15.
- [28] Chae-Hong Lim, Neo-liberalistic Higher Education Policy and the Public Education,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4, 171-206, 2003.
- [29] Sang-Sik Jo,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education policy: Critical review of MB Government's Education Policy", Education Criticism, 24, 38-53, 2008.
- [30]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

/499205.html

- [31] Jun-Sang Han, Interpreting Education Policy under the ‘civil Government’ and the Prospects for Education Reform by the Following Government, *Critical Review of History*, 140-177, 2007.
- [32] Ulrich Beck,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Theory, culture and society*, 1992.
- [33] Woong-Sun Hong, “Industrial society and humanistic education”,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1-9, 1979.
- [34] Th. W. Adorno, *Theorie der Halbbildung*, Adorno, Th. W.; *Gesellschafts-theorie und Kulturkritik Frankfurt/M.* pp. 66-94, 1975.
- [35] M. Apple, The politics of official knowledge: Does a national curriculum make sense?, *Teachers Colledge Record*, 95(2), pp. 321-331, 1993.
- [36] D. Aspin, J. Chapman, & V. Wilkinson, *Quality schooling: A programmatic approach to some current problems, topics and issues*, London: Cassell, 1994.
- [37] N. Davies, *The school report: The hidden truth about Britain’s Classrooms*, 2007.
- [38] H. Gardner, *Leading Minds*, Basic Books, 1995.
- [39] huntsun.tistory.com/153
- [40] F. I. Niethammer, *Der Streit des Philanthropinismus und Humanismus in der Theorie des Erziehungsunterrichts unserer Zeit*, Jena, 1808.
- [41]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42] K. A. Strike, “Is there a conflict between equity and excellence?”,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Vol. 7 No. 4, pp. 409-416, 1985.
- [43] J. VanTassel-Baska, Excellence as a standard for all education, *Roeper Review*, Vol. 20 No. 1, pp. 9-12, 1997.

안 관수(An, Kwan Su)



- 1986년 8월 : 독일 Dortmund대학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 학사)
- 1990년 2월 : 독일 Dortmund대학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 석사)
- 1994년 2월 : 독일 Dortmund대학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 박사)
- 2013년 11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인문사회융합콘텐츠센터장
- 관심분야 : 평생교육, 교육사회학, 힐링과 교육, 융합연구
- E-Mail : ksan@wonkwang.ac.kr

조 시 오(Cho, Si O)



- 2000년 2월 : 원광대학교 수학과 졸업(이학사)
- 2002년 2월 : 원광대학교 수학과 졸업(이학석사)
- 2010년 8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 박사)
- 2010년 8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시간강사
- 관심분야 : 교육사회, 평생교육.
- E-Mail : cj-0203@hamail.net